

# 광주시, 환급받을 법인세 100여억 방치

### 감사원, 광주시 기관운영감사...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부실 진행

### 법인세 18억 이중 지급...산단 진입로 안전 검사도 제대로 안해

광주시가 민자사업자와 광주제2순환도로 제1구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인세 18억원을 이중 지급하고, 민자사업자가 환급받은 시 부담 법인세 100억원을 돌려받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2017년부터 추진한 7산입단지 진입도로개설과 관련,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도 자체 심사만 실시해 그대로 개설될 경우 기형적 도로폭으로 인해 병목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광주광역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광주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부실하게 진행해 100여억원의 법인세를 필요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광주 제2순환도로 제1구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주식회사와 사업운영방식을 실제 사업수입이 약정된 추정 운영수입의 85%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방식'으로 진행해오다 2016년 12월부터 실제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투자비 보전 방식'으로 변경했다.

투자비 보전 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법인세가 환급된 경우 이를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

그런데 광주시는 환급액의 70%만 돌려주겠다는 A사의 제안에 2017년 1월 동의했다.

또 A사가 납부한 법인세 100여억원을 보전해 준 이후 이를 A사가 지난 3~4월 환급 받았지만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광주시는 사업운영방식을 미숙하게 처리해 A사에 법인세 18억원 이상 이중 보전해 주기도 했다.

2016년 12월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A사가 보전받는 MRG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추정 법인세' 등의 비용을 고려해 설정된 것이므로, MRG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 발생한 법인세를 2017년 마틴 '투자비 보전 방식'에 따라 보전해주면 이중 보전해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와 A사는 MRG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는 광주시가 보전하지 않고 A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합의서와 달리 2016년도분 MRG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 발생한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8억원 상당을 전액 보전했다.

감사원은 광주시장에게 돌려받지 못한 법인세 환급액 및 MRG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 발생한 법인세를 반환받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7산입단지 및 국도 13호선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안전 검사도 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같은해 6월 진입도로

전체구간을 단일 사업으로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도 7월 이 도로를 3개의 구간으로 분할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립했다.

광주시는 전체구간(4.8km)의 총 사업비가 560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도 각 구간의 사업주체와 투자 재원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심사를 받지 않고 광주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한 구간(1.8km)에 대해서만 같은해 11월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했다. 이후 이 구간을 포함한 총 2개 구간에 대해 각각 설계용역계약 체결했다.

이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투자심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관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광주시장에게 7산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전체 구간에 대해 행안부에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광주시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도로 위 술에 취해 지던 거구 20대 경찰관 위험

키 190cm, 몸무게 130kg에 달하는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잠을 자다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순찰차를 견어쳤다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순찰차를 견어 차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전 3시4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앞 도로 한복판에서 잠을 자다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관이 자고 있는 A씨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A씨는 다짜고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아래로 들어가는 등 40여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이 A씨를 연행하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은 몸으로 막으며 행패를 부렸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도 견어차 파손됐다.

40여분 난동 끝에 남성 경찰관 6명이 겨우 A씨의 팔다리를 붙잡아 제지하고서야 상황이 종료됐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광주에 놀러왔다가 술을 마신 후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 출소 2개월 잠기지 않은 차 82만원 훔친 20대

광주 광산경찰서는 28일 출소 2개월만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 침입,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2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2시46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B씨(24)의 차에 침입해 현금 8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손잡이에서 A씨의 지문을 확보해 범행 8일만에 붙잡았다.

A씨는 주거가 일정치 않고 누범기간인 점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A씨는 지난 8월 만기 출소한 후 모텔 등지에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 애견동호회에서 만난 女 수면제 먹고 성폭행 30대

애견동호회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와 B씨(31)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께 천안시 서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동호회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 음료를 먹였다.

A씨와 B씨는 여성이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 말다툼하다 지인 살해 40대 중국인 검거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살해한 중국인 A씨(46)를 살인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15분쯤 청원구 울랑동의 한 원룸 앞에서 지인 B씨(4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원룸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나가버리자 뒷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나눔에 동참하세요”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관계자들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을 앞두고 회비 모금 자료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 “국회, 전두환 경호 관련 예산 삭감하라”

5·18역사왜곡처벌법성단은 28일 “5·18민주화운동 학살자 전두환씨에 대한 경호를 중지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역사왜곡처벌법성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5·18역사왜곡처벌법성단의 국회 앞 농성이 29일을 맞이했다”며 “여전히 5·18의 핵심적 진실은 39년째 묻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으나 경호만큼은 제외하고 있다”며 “대통령 경호법에는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씨는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돼 경호 이외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법감정에 벗어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